

기업 구조조정 진행과정과 올바른 추진방향

신 후 식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사업구조 개선의 내용

외환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중복투자, 차입경영이라는 점에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크게 경제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 구조조정이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요소 시장, 상품시장, 대외거래부문, 산업구조, 정책결정 구조 등 경제의 각 부문에 대한 구조를 개혁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구조조정이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정산업내 혹은 산업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양산업의 퇴출지원(M&A 원활화, 퇴출제도 정비 등)과 퇴출된 생산요소를 흡수할 수 있는 신산업 창출 여건을 조성(R&D 지원, 기술혁신 체제확립, 창의적 전문인력 지원, 신산업 진입장벽 제거 등)하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경영구조, 지배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유형은 사업철수, 사업이관, 생산감축, 원가절감, 인원 합리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기업내 구조조정과 M&A, 기업분할, 전략적 제휴 등 기업간 구조조정이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는 한계사업 및 한계기업을 퇴출시키고 수익성 있는 핵심부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M&A 원활화, 퇴출 및 부실기업 처리제도 정비)하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수단이다. IMF이후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방향은 기업 구조조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내용은 크게 사업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3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업구조 개선 내용을 보면, 사업구조 개선은 기업규모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즉, 5대 대기업은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8개 업종의 사업교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항공, 유화,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정유, 반도체, 자동차 업종 등은 그룹에서 떼어내어 통합 법인화하거나, 사업교환을 하거나, 일부 업체에 사업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개별기업 단위에서도 사업구조 개편이 진행되어 왔다.

지분매각·사업매각·합작해제 등의 방식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외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계열사를 통폐합하고 아웃소싱과 고용조정 차원에서 분사화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6대 이하 대기업은 자체 구조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채권 금융기관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주도아래 기업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개선 작업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이 완전 부실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자율협상을 통해 기업이 회생 가능토록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회생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또는 대출금 출자전환 등으로 지원해주는 대신 기업은 핵심부문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계열사간 합병, 매각, 계열분리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채권금융기관간 기업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왔는데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6~64대 그룹 가운데 부도 협조응자 등으로 20여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됐으며 15개 그룹의 38개사와 중견 대기업, 34개사가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이 확정되었다. 15개 그룹은 총 248개 계열사 중 주력사를 제외한 196개사를 매각,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여 계열사를 52개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1>)

<표-1> 기업 구조조정 상황

5 대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유화, 항공, 자동차 7개 업종 사업교환 • 20개 계열사 퇴출 또는 합병 • 워크아웃 대상기업 각 1, 2개 선정 • 각 그룹 계열사 절반 수준으로 감축 및 외자유치 추진
6~64대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그룹 사실상 해체 • 15개 그룹 38개 기업 워크아웃 적용, 부채탕감, 출자전환, 합병, 자산매각 등 추진 • 196개사 매각 및 기업정리 • 계열사 52개로 축소
중견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 중견기업 기업개선 작업 • 조건부 지원기업의 구조조정 중점지원

<표-2> 구조조정 효과

구 분	내 용
투자합리화	중복과잉 투자, 신규투자 조정 등 → 향후 5년간 20조원 투자비 절감 → 핵심기술 투자확대 가능
단 가 상 승	덤핑경쟁 해소 등 → 10% 이상 수출단가 상승(예 : 철도차량의 경우 전동차 대당 4~5억원 → 10억원)
수 출 증 대	경쟁력 향상 → 매년 10% 이상 수출증대
원 가 절 감	물류비, 투자규모 합리화에 따른 금융비용 감축, 제조간접비 감축 등 → 매년 10% 이상 원가절감
외 국 자 본 유 치	'99년말까지 100억달러 외자유치 기대
고 용 유 지 및 확 대	3교대 근무 등 → 구조조정 업계 종사자(287,000명) 및 연관산업 종사자(예 : 자동차산업 1차 협력업체 종사자 360,000명) 등의 고용수준 유지, 가동률 및 수출증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 자료 : 전경련('98. 9).

2. 사업구조 개선의 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조 개선방향은 과잉공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시장참여 기업수를 줄여 출혈경쟁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6개사에 이르던 자동차 업체를 현대와 대우의 2개사 체제로, 가전 3사를 삼성과 LG의 2개사로, 반도체는 2개사로, 석유화학은 삼성과 현대를 하나로 묶고 과잉설비를 매각하며,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사업이 복수경쟁 체제에서 단일법인으로 묶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업종별로 3~5개 업체가 참여해 과당경쟁을 벌이던 것이 1개 또는 2개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통합기업의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사업교환이 되면 규모의 경제로 코스트를 하락시켜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가전과 같은 조립산업이 업체 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많은 부품업체 역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동집약적인 업종은 업체수를 줄이면 과잉인력 해소와 함께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이다.

설비의존형 업종은 단순히 합친다고 해서 공급과잉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기도 어려우며 과잉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설비과잉 업종에서 합병·인수를 통해 업체 수가 줄어들게 되면 출혈경쟁 요인이 사라지고, 가동률과 판매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표-2>)

3. 사업구조 개선의 방향

사업구조 개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 구조조정은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계열사 수 축소, 비주력사업 철수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한 '잘라내기'식의 구조조정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사업구조 개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기업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체질'을 갖게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사업축소나 조직축소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역량에 기초한 사업구조 개편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고 핵심사업까지 포기하는 등의 축소일변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성장기반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사업매각도 단순히 빚을 갚거나 적자사업을 도려낸다는 목적에서 벗어나 신규사업의 자금원 확보, 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업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리해고제 조기도 입 및 확대, 기업 퇴출제도 정비, 출자 총액제한 제도 폐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양수도시 조세감면, 공개매수제도 폐지 등

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을 구비하였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적지 않다.

첫째, 계열사 교환, 합병, 매각 등 사업구조 개선의 최대의 걸림돌은 계열사간 자금대차 및 보증 등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만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권의 출자전환과 세제혜택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도 주거래 은행간에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합병기업에 대한 채무보증분은 가급적 신용대출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이 대기업 보증도 확대하도록 보증기능을 확대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이연이나 감면이 필요하다. 또한 워크아웃(Workout) 과정에서 부채를 탕감한 금융기관에게는 부채탕감액 만큼을 손비로 인정하고, 기업에게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이익금을 불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시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현실화하여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합법인 설립이나 사업 맞교환 과정에서 빚어지는 노사갈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고용승계 의무도 신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3>)

4. 재무구조 개선의 내용

'98년말 5대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은 385%(자산재평가 포함시 302.1%) 수준으로 '97년(470.2%)보다 85% 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는 계열사와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재무구조 개선대책으로는 30대 대기업의 채무보증

〈표-3〉 사업교환의 문제점과 유인책

	문 제 점	유 인 책
금 융 기 관 등 채 권 자	-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채권자 반대 - 여신회수 및 신규여신 금지의 가능성 - 부채담감 및 출자전환에 대한 유인책 부재 -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가능성	-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적극화를 위한 지원 조치 - 부채담감시에 손금인정 등 유인책 제공 - 구조조정시에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 제외
종 업 원	- 정리해고 반대	- 합법적 정리해고 분위기 조성
주 주	- 외국인 및 소수주주의 반대 - 과점주주에 대한 세금부과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의 부분적 제한
정 부	-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 - 구조조정에 따른 세금증과 - 사업교환 지원조치에 대한 특혜시비 가능성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제도 적용의 한시적 적용제외 - 한시적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확대

을 '99년말까지 완전히 해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53개 기업은 '99년말까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기업과 은행간의 재무약정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각종 활동을 은행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5대그룹이 '99년말까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84.7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평균 부채비율을 국제적인 수준인 200% 이내로 맞추기로 했다.

자금조달 계획을 보면 첫째,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방식과 비주력 계열사 매각 및 사업부문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30대 계열(공정거래법)의 '97년 사업연도말 부채비율(금융, 보험제외)은 519%였으나 '98년말에는 380%로 낮아졌다. (〈표-4〉)

5대 그룹은 주로 자산재평가, 유상증자 등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23.2조원)로 부채비율이 하락(472.9% → 335.0%) 하였으며 6~30대 집단은 부채축소

(3.6조원)와 자기자본 증가(4.5조원)로 부채비율을 하락(616.8% → 497.7%) 시켰다.

그동안 재벌구조를 지탱해 왔던 상호 지급보증은 '98년 4월 1일부터 30대 재벌에 대해선 전면 금지됐으며 기존 채무보증도 2000년 3월까지 완전 해소토록 했다.

30대 그룹의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이 되는 상호 지보 총액은 '98년말 12조원으로 '98년초보다는 14조원, '97년보다는 21조원 정도 감소했다.

5대 그룹의 업종간 상호지보의 경우 사실상 완전히 해소했다.

〈표-4〉 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자산총액 (A)	자본총액 (B)	자 본 금	부채총액 (C=A-B)	부채비율 (C/B)
97년말	426.3	68.9	27.9	357.4	518.9
98년말	463.6	96.6	35.7	367.0	379.8
증 감	37.3	27.7	7.8	9.6	-139.1p

※ 주 : 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표-5〉 주요 산업별 부채비율 비교

	제조업	석유정제업	철 강	자동차	항공	조선	종합상사	건설업	운수
일본(96)	152.1	444.3	250.4	106.8	122.6	344.3	870.9	383.0	477.7
한국(98)	328.1	534.1	198.8	614.9	531.9	531.9	576	545.9	734.2

(단위 : %)

5.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

전경련에 의하면 '98년 중 5대 그룹과 6~30대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각각 9조 6,000억원, 7조 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채무보증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경우 30대 그룹은 22조에 달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된다. 이중 50% 가량이 신용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상호 지급보증 해소액은 1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형 그룹들은 자체 신용이나 교환보증 수단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다. 또한 채무보증 해소정책은 모기업을 통해 자금조달되는 해외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는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대기업의 경영구조가 지배주주나 경영자 중심에서 채권자, 기관투자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갈 것이다.

특히 부채비율 축소정책으로 기업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여야 한다. 부채를 200%로 낮추려면 일부 증자나 대출금의 출자전환(3조원 예상)을 감안하더라도 '99년 중 113.5조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상당폭 축소시켰으나 금감위는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외자유치에 제약요인이 많고, 구조조정의 매

물이 집중화되고 있어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정책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낮은 기업들은 유상증자가 어려워 2000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의 축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5〉) 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하고 강도높게 하려는 이유는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시켜 외자유입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이나 기업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부작용과 역효과가 순작용이나 순효과보다 클 수 있다. 무리한 재무구조 개선정책은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경기에 찬물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의 초점이 대기업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대기업의 경제활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은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6. 재무구조 개선의 방향

일부 재무구조 개선대책 등은 기업들의 달성여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금감위가 자산재평가에 의한 기업 부채비율 축소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부채비율 축소목표를 현행 200%에서 업종별로 신축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금융환경이 열악하여 상거래 관행상 어음거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고, 소비자 금융이 발달하지 못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표-6> 재무구조 개선 방안

	문 제 점
여신상환	-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 단기간내에 자산매각 또는 증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 예로
신용대출전환	- 기업신용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금융기관이 회피
채무주식전환	- 금융기관 부담 가중

또한 일본, 대만 등 경쟁 대상국보다 여전히 금융비용이 높다는 점, 비이자 발생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점, 직접금융 시장이 미발달되었다는 점도 부채비율이 높은 요인이다.

우리 나라의 직접금융과 소비자금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저금리정책 등을 피한다면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산재평가의 인

정과 회계처리 제도의 개선 등으로도 부채비율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표-6>)

7. 지배구조 개선의 내용

지배구조 개선대책으로는 크게 기업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대책, 대주주에 대한 경영활동 감시대책, 기업인수 활성화 대책 등이 마련되었다. 기업회계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법, 1999 회계연도 기준), 상호지급보증 등 대외부채의 즉시 공시 및 불성실 공시 규제강화(증권위 규정) 등의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9회계연도부터 대폭 강화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30대 재벌에 대해서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30대 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그룹내에

<표-7> 지배구조 개선 대책

기업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 대책	- 결합재무제표 도입(외부감사법) • 1999 회계연도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 •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기업집단 대상(국내법인+해외현지법인 포함) - 상호지급보증 등 대외부채 즉시공시 및 불성실 공시 규제 강화(증권위 규정)
대주주에 대한 경영감시 강화	-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및 사외감사 선임 권고 • 총이사 수의 25% 이상(최소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의무화 • 상장법인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제청하에 감사인 선임(외감법 시행령) - 상장법인의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 권한 강화(증권거래법) • 대표소송권 : 1→0.05%,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 행사요건은 0.5%, 회계장부 열람권 : 3→0.1% - 대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여 책임을 강화(상법)
기업인수(M & A) 활성화 조치	-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허용 • 외국인의 기업의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인상(10→1/3) (외자도입법) -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재경부 허가제도 폐지 •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 폐지 • 발행주식 총수의 25%의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50% 이상을 초과해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 인수비용을 크게 경감 -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폐지 • 30대 그룹 계열사는 당해회사 순자산의 25% 이상 타회사 출자를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

서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계열사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조치하고 있다.

그룹들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자산총액이 2~5위권에 포함되는 계열사를 선택해 작성주체 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는 이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작성주체 회사는 99사업년도 결산 결합재무제표를 2000년 7월말까지 보고할 계획이다. 대주주에 대한 경영활동 감시대책으로는 소수주주권 강화,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도입 등이 마련되었다.

기업인수 활성화 대책으로는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M&A) 허용, 출자총액 한도제도 폐지 등의 조치가 들어있다.

의무화된 사외이사는 5대 그룹에서만 122명(71개 상장사)을 영입했고 권고사항인 사외감사도 66명을 선임하는 등 경영투명성 확보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표-7>)

8.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

결합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한 재무관련 지표의 악화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기업들의 신규차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신규차입을 하여도 예전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시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2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 순이익, 매출, 자산 규모가 10~30%(2000년~2002년 중 약 3,600억원~5,400억원 수익 악화 예상)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M&A 시장개방, 소수주주권의 강화 등으로 기업들은 경영권에 대한 위협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경영참여 요구 증대라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9.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

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목적은 비용절감, 경쟁력 강화와 이익창출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경쟁력은 신기술 개발, 신시장과 신상품 개척, 생산성 증대, 기업이 정신 등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혁신적인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최근의 기업구조 개선조치들은 지나치게 규제적인 내용들이다. 글로벌시대의 기업정책은 통제와 규제가 아니라 시장경제 메카니즘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경기규칙을 제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쳐야 한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시장기능을 통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못견디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관행이 정상화되고 주식시장이나 시장규율이 확립되면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기업구조 개선지역이 경제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기업정책의 목적이 기업 구조조정 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자구노력을 가로막는 금융관행의 여건개선이 선행되어야져야 효율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개별기업들이 기업정책을 통해 미래의 경영환경 변화를 예견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초 아래에서 추진하되 정책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정책은 경상수지 흑자유지, 외환안정, 침체된 경기의 조속한 회복과 고용기반의 구축 등 거시경제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A**

※ 본고는 집필자의 견해로 당 협회의 공식의견은 아닙니다.